

1 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 ②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지향한다.
- ③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 ④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행태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해설

③ (×)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제도만이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신제도론은 제도와 제도, 제도와 인간, 제도와 정책, 제도의 성립과 변화 등의 인과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설명하는 분석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제도와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제도가 인간들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정책의 내용과 효과(성과)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주로 연구한다. 이렇게 신제도론은 구제도론에서 간과했던 제도 밖의 요인들, 즉 정책·사회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제도를 중심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분석도 추구한다.

답 ③

2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는 계층제 구조를 본질로 하고 있다.
- ② 관료제를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조직모형으로 보고 있다.
- ③ 신행정학에서는 탈(脫)관료제 모형으로서 수평적이고 임시적인 조직모형을 제안한다.
- ④ 행정조직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의 관점에서 관료제 모형을 제시했다.

해설

④ (×) 베버의 관료제는 이념형(ideal type)을 특징으로 한다.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는 현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경험적으로 추출하거나 평균화하여 정립한 것이 아니라 사유작용에 의해 가장 합리적으로 작업능률을 극대화시키는 이상적 조직의 조건으로서 정립한 가설적 모형이다. 따라서 사실적 기술(記述)이 아니며 현존하는 실제 조직과도 다르고, 있어야 할 도덕적 이상이나 모범, 규범적 선호상태도 아니다. 이념형 관료제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현실의 대규모 조직체를 이념형 관료제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문연구에 있어서 paradigm이란 어떤 시기에 공유되는 신념·가치·방법론·기술 전반을 구성하는 과학연구의 원형(prototype)이나 이론적 틀을 의미하며 이는 모범이나 규범적 표준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④는 베버가 주장한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이 아니다. 즉 행정조직의 발전·변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적 이상이나 모범으로서 제시된 조직구조는 아니다.

답 ④

3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재화의 감가상각 가치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
- ㉡ 부채 규모와 총자산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 ㉢ 현금이 거래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 ㉣ 복식부기 기장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발생주의의 특징 / ㉡㉣ : 현금주의의 특징

| 구분   | 현금주의(cash basis ; 형식주의)                                                                                                                           | 발생주의(accrual basis ; 실질주의, 채권채무주의)                                                                                                                                           |
|------|---------------------------------------------------------------------------------------------------------------------------------------------------|------------------------------------------------------------------------------------------------------------------------------------------------------------------------------|
| 인식기준 | 현금의 수불(수취·지불) 사실을 기준으로 인식<br>현금 유입시 수입으로 인식, 현금 유출시 지출로 인식<br>수입은 현금수납이 있을 때 기록<br>지출은 현금지급 및 수표발행이 있을 때 기록<br>자산·부채 변동은 비망(備忘)기록으로 관리(공식적 표기 없음) |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br>수익의 획득과 비용(지출)의 발생(자산 변동·증감)시점 기준<br>현금으로 회수될 채권 발생시(징수결정시점) 수익으로 인식<br>현금을 지불할 채무 발생시(채무확정시점) 비용으로 인식<br>자산·부채 평가(주관적), 자산·부채 변동의 공식적 표기 |
| 인식내용 | 미지급비용·미수수익(未收收益)은 인식 안 됨<br>선급비용(先給費用)은 비용으로 선수수익(先受收益)은 수익으로 인식<br>감가상각·대손상각·제품보증비·퇴직급여충당금은 인식 못함<br>무상거래는 인식 안 됨<br>상환이자지급액은 지급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 미지급비용은 부채로, 미수수익은 자산으로 인식<br>선급비용은 자산으로, 선수수익은 부채로 인식<br>감가상각·대손상각·제품보증비·퇴직급여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식<br>무상거래는 이중거래로 인식(정부는 비용으로 인식)<br>상환이자지급액은 기간별 인식                                  |

|      |                                                                                         |                                                                               |
|------|-----------------------------------------------------------------------------------------|-------------------------------------------------------------------------------|
| 특징   | 절차 간편, 회계 비용 저렴, 비목별 통제 용이                                                              | 절차 복잡, 회계 관련 비용 높음, 비목별 통제 곤란                                                 |
|      | 외형상 수지균형의 재정건전성(부채 규모 파악 안 됨)<br>재정상황의 총괄적 인식 곤란, 경영성과 파악 곤란<br>원가산정·비용편익분석, 거래오류 파악 곤란 | 실질적 재정건전성(부채 규모 파악)<br>재정상황의 총괄적 인식, 경영성과 파악 용이<br>원가산정·비용편익분석 용이, 거래오류 파악 용이 |
| 기장방식 | 주로 단식부기 활용. 복식부기도 가능                                                                    | 복식부기 활용. 단식부기 불가                                                              |

답 ①

#### 4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과 경영은 어느 정도 관료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 행정과 경영은 관리기술이 유사하다.
- ③ 행정과 경영은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 ④ 행정과 경영은 비슷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 해설

- ①② (○) 관료제적 구조, 관리기술(인사·재무·조직관리)의 성격은 유사점이다.
- ③ (○) 행정과 경영의 목표는 각각 공익과 사익(이윤)으로 다르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활동'인 점은 유사하다.
- ④ (×) 행정은 행정은 공공적 성격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적용을 받는 반면 경영은 자율성이 강하다.

답 ④

#### 5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이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정치체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②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며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 ④ (×)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하게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 ☞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            |                                                                                                                                                                                                                                                                                                                                                              |
|------------|--------------------------------------------------------------------------------------------------------------------------------------------------------------------------------------------------------------------------------------------------------------------------------------------------------------------------------------------------------------|
| 수평적<br>형평성 | ㉠ 동일 대상은 동일하게 대우(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 ; equal treatment for equals).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결정기준이 되는 특성에 상응하는 같은 양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br>㉡ 소득·가정환경 등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됨.<br>㉢ 적용례 : 선거에 있어서 1인 1표주의(보통선거), 비용부담의 문제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응급주의), 공개경쟁채용시험(실적주의), 비례제제도, 납세와 국방의 의무 등.                                                                               |
| 수직적<br>형평성 | ㉠ 다른 대상은 다르게 대우(대등하지 않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취급 ; unequal treatment for unequals).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동등하게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단의 기준.<br>㉡ 이질적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를 배분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기준(주민수요·납세능력·최소한도의 생활수준 등)에 따라야만 형평성이 확보됨. 각 개인의 특성(성별·연령·거주지역·재산 등)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준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됨.<br>㉢ 적용례 : 공직임용상의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 누진소득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재분배정책 |

답 ④

#### 6 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는 전통적이고 관료적인 관리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진행된 개혁 프로그램이다.
- ②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크기와 관계없이 시장 지향적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개혁방안에 관심을 갖는다.
- ③ 시장성 테스트, 경쟁의 도입, 민영화나 규제완화 등 일련의 정부개혁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 ④ 신공공관리 옹호론자들은 기존 관료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해설

- ② (×) 신공공관리론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지나치게 팽창된 정부규모(특히 행정부)를 적정화하고 시장원리를 활용한 효율적 정부운영을 주장한다.

답 ②

7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는 미충족시 불만이 제기되는 요인(불만요인)의 충족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동기요인)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 학자로 옳은 것은?

- ① F. Herzberg                      ② C. Argyris                      ③ A. H. Maslow                      ④ V. H. Vroom

해설

•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 2요인론 = 동기·위생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 불만·위생요인은 동기부여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생산성 증대와 직접 관계가 없고 작업의 손실을 막아줄 뿐이며, 만족·동기요인이 생산성을 직접 향상시키는 충분조건이라도 봄. 즉 두 요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다고 봄

답 ①

8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적 방법은 동작연구, 시간연구 등에서 같이 행정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 보편타당한 법칙성을 도출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②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변수 중에서 특히 환경변화와 사람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③ 역사적 접근방법과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제도와 구조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시스템적 방법의 장점은 시스템을 이루는 부분들 각각의 기능과 부분 간 유기적 상호 작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해설

- ① (○)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the best one way)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② (×)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체제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접근이며, 미시적인 인간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③ (○) 역사적 접근방법의 경우 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사례연구나 발생론적 접근으로 설명, 법적·제도적 접근은 공식적인 제도·구조(법령)에 초점을 두고 법령에 규정된 주요 기관의 권한·기능의 파악에 중점.  
 ④ (○) 시스템적 접근방법(체제이론)은 조직을 상호작용하는 여러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유기적 복합체인 체제로 보고 전체적 관련성 속에서 체제 내의 구성요소 간 또는 체제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분석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답 ②

9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은 행정학의 발달과정에 있어 통치기능설과 관계가 있다.  
 ② 정책은 공정성과 가치중립성(value-free)을 지향한다.  
 ③ 정책은 행정국가화 경향의 산물이다.  
 ④ 정책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설

- ① (○) 통치기능설은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중시  
 ② (×) 정책은 공공성·가치지향성·규범성을 지님  
 ③ (○) 사회문제의 증가와 해결요구의 증대는 정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행정기능의 확대로 연결.  
 ④ (○) 정책을 통한 정부활동의 지나친 증가는 정부실패로 연결될 수 있음.

답 ②

10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식백지신탁  
 ②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③ 선물신고  
 ④ 상벌사항 공개

해설

- ④ (×) 상벌사항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내용이 아님. 참고로 특정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은 비공개사항이다.

답 ④

| ☞ 정윤리의 내용(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율) |                                |                                                                                                                                                                                                                                                                                                                                                    |
|-----------------------------|--------------------------------|----------------------------------------------------------------------------------------------------------------------------------------------------------------------------------------------------------------------------------------------------------------------------------------------------------------------------------------------------|
| 법적<br>타율적 규범                | 헌법                             |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br>* 충성의 의무를 헌법상 의무(헌법에 규정된 의무 x)로 분류하기도 함                                                                                                                                                                                                                                                               |
|                             | 국가공무원법                         | ① 성실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청렴의무, ⑥ 품위유지의무, ⑦ 종교종립의무, ⑧ 선서의무, ⑨ 외국정부의 영예 등 규제, ⑩ 직장이탈 금지, ⑪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⑫ 정치운동 금지, ⑬ 집단행위 금지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규정.                                                                                                                                                                                         |
|                             | 공직자윤리법                         | ① 이해충돌방지금지,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인도,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3년) 및 행위제한, 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규정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① 부패행위신고(내부고발)의무 및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②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5년), ④ 공직자의 청렴의무 * 국민감사청구, 부패유발 요인 검토, 공무원행동강령의 근거, 검찰에의 고발과 재정신청 등 규정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①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② 직무수행 관련 공평무사한 처신 및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③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부정청탁의 신고, ④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수수금지품등의 신고, 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⑥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①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직무의 공정·청렴한 수행, 직무수행 관련 공평무사한 처신과 직무관련자 우대나 차별 금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곤란시 직무수행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② 신고 및 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제한 및 금지 행위(㉠ 가족 채용 제한, ㉡ 수익계약 체결 제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행정적<br>자율적 규범               | 기타 개별법                         |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공개)<br>②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공무원범죄를 통한 불법수익 추적·환수)<br>③ 공직선거법(선거범죄자 임용제한)                                                                                                                                                                                                                                  |
|                             | 추상적 규범                         | 공무원헌장(2016. 대통령훈령. 기존 공무원윤리헌장을 대체)                                                                                                                                                                                                                                                                                                                 |
|                             | 구체적 규범                         | 공무원행동강령(2005. 대통령령)                                                                                                                                                                                                                                                                                                                                |

## 11 정책결정의 장에 대한 이론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원주의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정책결정의 장을 주도하고 이들이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거쳐 도달한 합의가 정책이 된다고 본다.
- ② 엘리트주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지배된다고 본다.
- ③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보다 중시하는 이론이 조합주의이다.
- ④ 철의 삼각(iron triangle) 논의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의 3자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연합을 형성하면서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 해설

- ③ (×) 조합주의는 이익집단들이 단일적·위계적·비경쟁적인 전국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하고, 일면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대가로 특정범주의 이익공동체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체계이다. 1970년대 조합주의는 국가의 소극성과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다원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논의된 **국가주의 시각의 이론**이다. 정책결정에 있어 더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와 이익집단과의 상호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중시한다. 다원주의와 달리 **정부는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비교

| 구분          | 다원주의                                   | 조합주의                                                   |
|-------------|----------------------------------------|--------------------------------------------------------|
| 정부관         | 국가는 수동적·중립적 역할(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 수용)        | 국가의 능동적·적극적·비중립적 역할(국가이익 확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사회개입) |
| 주요행위자       | 이익집단(이익집단의 국가에 대한 투입기능 강조)             | 국가(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기능에 중점)                              |
| 국가와 이익집단    | 국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이익집단 결성                 | 국가의 개입과 승인 하에 비자율적인 이익집단 결성                            |
|             | 이익집단은 국가와 자율적 관계 / 로비활동을 하지만 독립적 관계    | 이익집단은 국가와 비자율적 관계 / 편익을 주고받는 협력적 관계                    |
|             | 개방적 협상                                 | 폐쇄적 협상(정책결정이 폐쇄적 성격을 지님)                               |
| 이익집단 간 관계   | 경쟁정·수평적 관계<br>경쟁을 통한 negative-sum game | 비경쟁정(협력적)·위계적(계층적) 관계<br>협력을 통한 positive-sum game      |
| 이익집단의 행태    | 개별 집단의 이익 추구                           | 사회적 책임·합의·사회적 조화 등의 가치도 중시                             |
| 독점적 대표권     | 이익집단의 독점적 대표권 없음                       | 이익집단의 독점적 대표권이 존재함(국가가 부여)                             |
| 정책결정        | 다양한 이익집단 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 정부와 이익집단 간 제도화된 합의에 의해 결정                              |
| 이익집단의 의회접근도 | 높음                                     | 낮음                                                     |

## 12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십에 있어 자질론적 접근은 리더가 만들어지기보다는 특별한 역량을 타고나는 것임을 강조한다.
- ② 민주형 리더십은 권위와 최종책임을 위임하며 부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쌍방향 의사전달의 특징을 지닌다.
- ③ 리더십에 있어 경로-목표모형은 리더의 행태가 어떻게 조직원으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시키도록 하는 리더십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준다.
- ④ 상황론적 관점에서 보면 부하의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업환경에서는 지원적 리더십보다 지시적 리더십이 보다 부하의 만족을 높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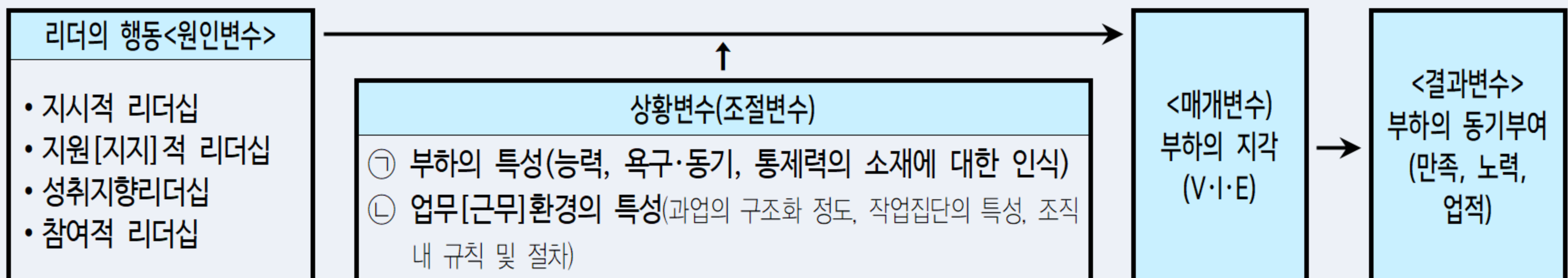
- ① (○) 자질론(특성론)적 접근법은 리더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공적인 리더 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자질(정열, 용기, 청렴성, 결단력, 창조성, 근면성, 육체적·신체적 특성, 정신적 에너지, 체력, 지적 능력 등)을 파악
- ② (○) 민주형 리더십은 부하에게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위임한다. 최종책임은 리더가 지는 것이지만 최종책임까지 위임하는 것은 아님.

• 권위형과 민주형 리더십의 특징 - 르윈(K. Lewin), 리피트(R. Lippitt), 화이트(R. White) - 아이오와(Iowa) 대학의 연구(1958)

| 유 형          | 관 점                   | 권력기초           | 인간관                      | 목 적                   | 감 독                 | 의사전달                   | 결 정                   |
|--------------|-----------------------|----------------|--------------------------|-----------------------|---------------------|------------------------|-----------------------|
| 권위형<br>(독재형) | 업무 중심적(추종자에게 지시·명령)   | 지도자의<br>직위     | X형(계고르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     | 지도대상집단의 임무 수행, 조직의 필요 | 추종자 행동을 면밀히 통제·감시   | 윤형(wheel type), 정보독점   | 참여거부                  |
| 민주형          | 인간관계 중심적(추종자의 참여·자율성) | 지도대상<br>집단의 동의 | Y형(자기규제적,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음) | 추종자의 만족, 인간 관계        | 추종자의 자율성 존중, 일반적 감독 | 개방형, 부하와 지도자 간 의사전달 원활 | 참여 촉진,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위임 |

- ③④ (○) 하우스와 에반스(R. House & M. Evans)의 경로 - 목표모형(통로-목표모형 : Path - Goal Theory. 1971)

- ㉠ 의의 :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리더에 대한 수용성, 동기적 행위 등을 리더의 특성, 부하의 특성, 업무[근무]환경의 특성(외부환경 요인x)을 통해 설명. 개인의 태도와 행동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예측된다는 기대이론처럼, 리더의 행동이 부하의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부하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봄. 리더는 부하가 바라는 보상(목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행동(경로)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부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봄.
- ㉡ 리더의 행동 유형 :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고 상황변수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봄. 리더십 유형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라 리더의 행동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즉, 동일한 지도자라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만족도를 높여 조직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 조직 구성원들의 기대(expectancy)와 유인가(valence)를 조절변수로 설정하는 등 기대이론을 적용한다. (x) - 기대와 유인가는 매개변수, 조절변수는 상황변수

- ㉢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 유형

| 상 황 변 수         |                       |                                  | 적합한 리더십 유형 |    |    |      |
|-----------------|-----------------------|----------------------------------|------------|----|----|------|
| 부하의<br>특성       | 업무수행 능력에<br>대한 인식     | 자신의 능력·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식              | 지시         | 지원 |    |      |
|                 |                       | 자신의 능력·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식              |            | 지원 | 참여 | 성취지향 |
|                 | 통제력 소재에<br>대한 인식      | 외부(관리자에 의한 통제)                   | 지시         |    |    |      |
|                 |                       | 내부(자기 스스로 통제)                    |            |    | 참여 |      |
|                 | 욕구·동기                 |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강함                  | 지시         |    |    |      |
|                 |                       | 사회적 욕구, 존경욕구 강함                  |            | 지원 |    |      |
| 업무<br>환경의<br>특성 | 과업의 구조화 정도            | 비일상적이고 비구조화된 과업(역할모호성 높음)        | 지시         |    | 참여 | 성취지향 |
|                 |                       |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작업(단순 반복적 과업)         |            | 지원 |    |      |
|                 | 작업집단의 특성              | 집단형성 초기(불안정·형성기)                 | 지시         |    |    |      |
|                 |                       | 집단형성 완료(안정·정착기)                  |            | 지원 | 참여 |      |
|                 | 조직의 특성<br>(공식적 권한 체계) | 종업원의 작업을 지배하는 공식적 규칙·절차·방침 등 불명확 | 지시         |    |    |      |
|                 |                       | 종업원의 작업을 지배하는 공식적 규칙·절차·방침 등 명확  |            |    | 참여 |      |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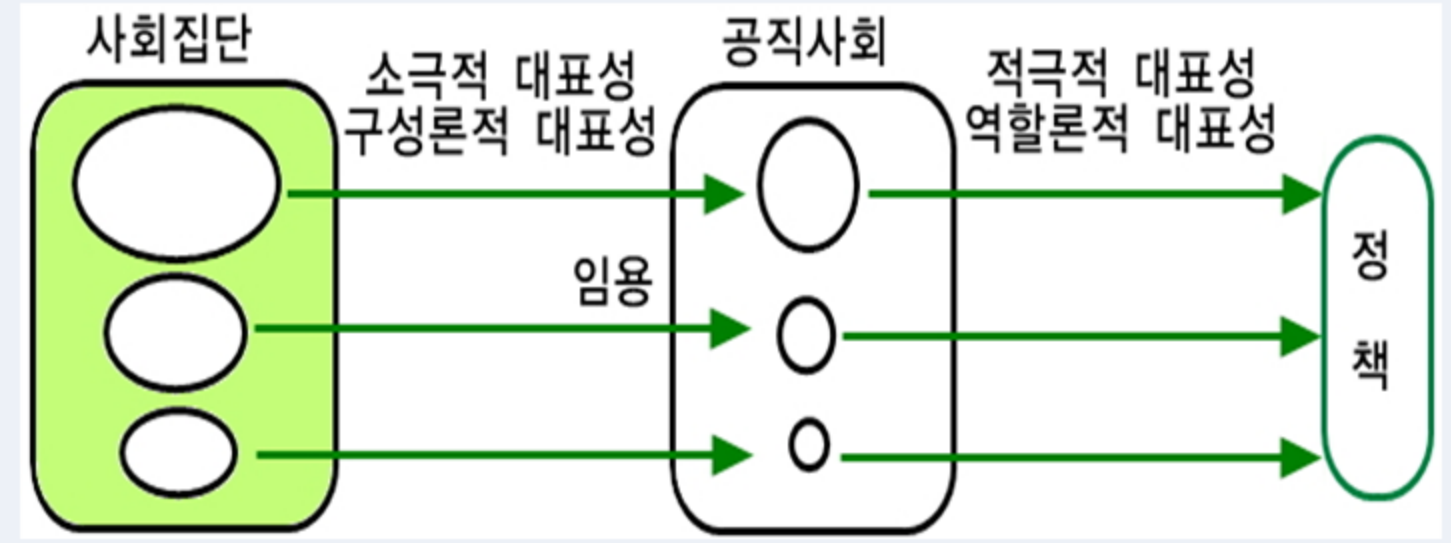
## 13 조직형태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습조직은 시스템적 사고에 의한 유기적, 체제적 조직관을 바탕으로 한다.
- ②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과 공급, 유통 등을 서로 다양한 조직에서 따로 수행한다.
- ③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와 계층구조를 결합시킨 이원적 형태이다.
- ④ 가상조직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이고 임시적 조직으로 볼 수 있다.



해설

- ① (×) 개방형 임용은 공직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
- ② (○) 계급제는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전직·전보가 용이하며 승진의 폭이 넓어 인사관리(인력활용)의 탄력성·융통성·신축성이 큼. 관리자 입장에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인사권자의 재량이 커지며 리더십 발휘가 용이함. 직원 입장에서 순환근무가 용이해져 경력개발의 기회를 넓혀 줌. 조직 입장에서 순환보직 등 수평적 보직이동이 촉진되어 부서 간 협조·조정을 용이하게 함.
- ③ (○)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에 당원이 공직에 임명되므로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 강화, 책임행정의 구현 등 행정의 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④ (○) •대표관료제의 기본 전제 :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연결(사회적 대표성이 정치적·정책적 대표성을 확보) - 관료와 국민사이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유사성의 정도와 그들 간 정책태도 또는 정책선호의 유사성의 정도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정(공무원의 행태는 자신과 출신배경을 같이 하는 집단의 가치와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 각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의 상호조정과 타협을 거쳐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산출됨)



답 ①

## 17 예산과정 중에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예산심의                      ② 예산집행                      ③ 회계검사                      ④ 예비타당성조사

해설

예산심의과정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타당성이 결합되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재정동의권을 부여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다.

답 ①

[관련기출]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해경간부 / 2009 국가9급

- ① 예산심의는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②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 ④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답 ③

## 18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 ②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석의 초점은 지출대상이며 이를 통해 통제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 ③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 ④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와 예산의 연결을 통해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해설

- ① (×) 성과주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향상시키지만 성과(outcomes)지표가 아닌 업무량과 산출(outputs)지표에 의한 예산운영에 그치고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효과성 측정이 곤란하다고 본다. 단, 절약·능률보다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에 관심을 두는 예산제도로 성취될 업무량 측정은 물론 업무 완료시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음(새행정학-이중수 외).
- ② (○) 품목별예산은 예산을 투입요소인 지출대상(품목)별(인건비, 소모품비, 출장비 등)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그 비용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통제지향적·투입지향적 예산제도이다.
- ③ (×) 기존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에 관심, 신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외에도 결과(outcome) 중시  
     └ 성과주의예산 : 투입과 산출(outputs) 중심. 능률성 중시  
     └ 신성과주의예산 : 산출(outputs)과 결과(outcomes) 중심. 능률성과 효과성 중시 ⇨ 결과(outputs)지향예산이라고도 함  
 다만, 새행정학(이중수 외)에는 다음 내용이 있음. '결과지향적 예산은 재정사업을 위해 예산을 요구할 때 '구체적 산출물'을 강조하며 집행에서는 재량을 확대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체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 ④ (×)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매개로 하여 연계시키며, 투명성·대응성과는 거리가 멀다.

답 ②

## 19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민주화 진작                      ② 지역 간 격차 완화                      ③ 행정의 대응성 강화                      ④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해설

- ② (×) 지방분권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답 ②

## 20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자치권에 대한 인식은 전래권으로 본다.  
 ㉡ 권한부여 방식은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기능적 협력관계이다.  
 ㉣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 해설

㉠㉡㉢ : 단체자치의 특징 / ㉣ : 주민자치의 특징

\* 정답 여부 : 정답은 ④로 발표·확정되었다. 그러나 분명히 ㉣은 단체자치의 특징으로 보지 않는다. 혹시라도 어떤 놈이 기능적 협력관계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면 '기능적 협력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답 없음으로 본다. 덧붙인 과거 기출문제를 참조하길 바란다.

답 없음

### [관련기출]

#### 1. 다음 중 주민자치제도와 단체자치제도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9급

-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전래권으로 본다.  
 ② 주민자치는 권한부여방식으로 포괄적 위임주의를 채택하고, 단체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④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에의 주민 참여를 중시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한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의 경우 주민자치는 기능적 협력관계, 단체자치는 권력적 감독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 2. 지방자치에는 대륙형 지방자치인 단체자치와 영국형 지방자치인 주민자치 있다. 다음 중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① **단체자치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기능적 협력관계로 보고 있다.**  
 ② 단체자치는 권한배분방식에 있어서 개별적 지정주의에 기초한다.  
 ③ 주민자치는 입법적, 사법적 통제를 중시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행정적 통제를 중시한다.  
 ④ 주민자치에 있어서 지방행정기관의 형태는 주로 기관대립형이다.  
 ⑤ 단체자치는 독립세 위주의 세입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주민자치의 경우 부가세 위주의 세입을 기반으로 한다.

답 1. ② 2. ③

## 21 다음 중 예산과 관련된 이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욕구체계이론                      ② 다중합리성 모형                      ③ 단절균형이론                      ④ 점증주의

### 해설

• 기존 예산결정이론인 합리주의(총체주의), 점증주의 외에 최근의 예산결정이론으로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다중합리성이론(Multiple Rationalities Theory),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구조결정론(Structural Theory), 모호성 모형(Ambiguity model) 등이 있다.

답 ①

### ☞ 예산결정이론 중 다중합리성이론, 단절균형이론

#### 1. 다중합리성이론(Multiple Rationalities Theory) - 서메이어(K. Thur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

- ① 예산을 결정하는 결정자 또는 조직은 다양한 합리성을 내포하고 다양한 합리성에 근거한 목적들을 추구하여 예산에 관련된 결정을 한다는 이론(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Rubin의 실시간예산운영모형을 통합). 기존 예산결정이론이 완전한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 중 어느 것이 더 설명력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예산결정자와 예산결정기관 내에 다중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봄(예산결정과정이 가진 복잡성을 이론으로 포섭).  
 ② 중앙예산기구는 반대자, 통로(conduit), 촉진자, 정책분석가,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효과성 측면에서 정치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을,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 예산결정자의 의사결정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으로 구성됨.  
 ③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 중앙예산기관의 예산분석가들을 중심으로 각 예산주기 간의 관계, 정보의 흐름, 예산상의 역할, 최종 지출계획을 결정하는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고자 함  
 ④ 정부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 예 Rubin의 실시간예산운영모형

■ 루빈(I.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 : 성질이 다르지만, 서로 연결이 된 세입, 세출, 예산균형, 예산집행, 예산과정의 5가지 흐름이 통합되면서 초래되는 의사결정모형 제시. 기본적으로 예산 정치에 관한 모형이며 예산 운영은 경제적·정치적 환경에 개방되며, 변화하는 외부 요인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실시간(real time)이란 한 결정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다른 결정의 흐름으로부터 오는 정보와 결정에 적응하는 것.

| 의사결정 흐름 | 개념                 | 정치               | 관심                                              |
|---------|--------------------|------------------|-------------------------------------------------|
| 세입 흐름   |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 설득의 정치           | 세입원의 기술적 추계, 세입원의 제약 조건 변경 여부·방법 결정             |
| 세출 흐름   |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 선택의 정치           | 기준예산의 기술적 추계, 예산획득을 위한 경쟁과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
| 예산균형흐름  | 예산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제약조건의 정치         |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결정                               |
| 예산집행흐름  |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 책임성의 정치          | 집행의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기술적 성격 강함)                   |
| 예산과정흐름  | 누가, 어떻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납세자인 시민과 예산 배분결정자인 정부관료 간 결정 권한의 균형 |

- ⑤ 조직 내에 다양한 합리성이 공존하며 특정 유형의 합리성만이 유일하게 조직의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중기준의사결정이론, 다중합리성조직이론, 관료제재량권이론과 같은 맥락.

2.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 바움가트너(F. Baumgartner)와 존스(B. Jones)

- ① 정책변화나 예산변화에 있어서 빈번한 소폭적 변화와 간헐적인 대폭적 변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기존의 점증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를 포함한 이론으로 정책이나 예산은 균형상태(equilibrium)가 지속되다가 단절적인 변화(punctuation)가 발생하고 다시 균형상태가 지속된다는 이론. 단절은 대폭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때 존재하고, 균형은 소폭적 변화가 주로 발생할 때 존재하며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는 이유와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 ② 정책변화나 예산변화가 대부분 점증적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비점증적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비점증적 변화는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예산이론이나 정책이론에 있어서 점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이론.
- ③ 단절균형은 진화생물학,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으로 정책과정 및 예산과정이론에 수용됨. 균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의제목록, 정책독점, 정책하위체계, 제한적 합리성 등이 활용되고, 예산의 단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정책 독점의 붕괴, 대중매체의 관심, 정책이미지, 정책투입활동 등이 활용됨.
- ④ 정책결정을 소수의 정책결정자들만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닫힌 시스템이자 구조인 정책독점 상황에서는 단일의 정책이미지가 폭넓게 지지를 받아 지속적인 안정이 유지되고 점증적 변화만 나타남. 그러나 정책이미지의 변화로 인해 대중매체·여론에 의해 어떤 이슈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증대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기존의 이해관계자 간의 권력 균형이 깨지며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됨. 정책독점이 붕괴되면 정책이슈는 정책하위체계로부터 거시정치체계로 이동하여 급격한 정책변화가 나타나 오랫동안 지속되던 정책이나 예산에 단절이 발생함.
- ⑤ 정책체계에서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정보가 부정((負)의)으로 환류(negative feedback)가 되면 정책독점이 유지되고 하위정책체계인 정책공동체 내부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적(正的)인 환류(positive feedback)가 이루어지면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정책이슈가 거시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슈네트워크로 이동되어 정책 또는 예산의 변동이 발생.
- ⑥ 한계 : 사후적 분석으로는 적절하나 단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22 지방재정 지표 중 총세입(總歲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 ① 재정자립도                      ② 재정탄력도                      ③ 재정자주도                      ④ 재정력지수

해설

재정자주도

- ① 일반회계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일반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

$$\bullet \text{ 지방재자주도}(\%)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조정교부금}}{\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 \quad * \text{「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blacklozenge \text{ 정부재정지표 상 재정자주도(일반회계 기준)}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학문적으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은 유사하게 쓰이나 정부재정지표에서는 개념을 구별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지방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이다.(△) - 광역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경우에만 옳음.

- ④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으므로 재원활용능력이 높아지며 세출측면의 자율성이 강해짐(재정자립도는 세입측면만 고려해 산출한 지표이지만 일반재원의 비율을 보여주므로 실제로 세출(지출) 측면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       |                                                                                                                                                                    |                                                        |
|-------|--------------------------------------------------------------------------------------------------------------------------------------------------------------------|--------------------------------------------------------|
| 재정자립도 | $\frac{\text{자주재원}}{\text{총재원}} \times 100 = \frac{\text{자주재원}}{\text{자주재원} + \text{의존재원}} \times 100 = \frac{\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text{세입총액}} \times 100$ | 총재원 중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율                              |
| 재정자주도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조정교부금}}{\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                                                                          | 총재원 중 일반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비율                |
| 재정력지수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정하는 지표 |

답 ③

## 23 조직이론과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이론의 시작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00년대 초까지 효율성과 구조 중심의 사상을 담고 있었다.
- ② 기계적 조직으로서의 관료제는 합리적 경제인의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테일러의 차등성과급제가 이러한 인간관에 기초한 보상 시스템이다.
- ③ 계층구조는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가지며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특성을 가진다.
- ④ 관료제 하에서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나 충동을 멀리하는 정의적 행동(personal conduct)이 기대된다.

해설

- ④ (×) 관료제는 비정의성을 특징으로 함.

• 비정의성(非情誼性 ; impersonality - 비사인성·물개인성·물주관성·비개인성), 공·사(公·私) 구별 : 관료들은 공식적 업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

나 기호의 영향을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됨(영혼이 없는 관료). 비정의성은 권력자의 인격적 지배를 방지하며 개개인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여 합리적·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절차적 정의를 가능하게 함.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되어 사적인 감정을 공적 업무 수행에 연결시키지 않음.

답 ④

## 24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법론적 집단주의를 지향한다.
- ② 정치·행정현상을 경제학적 논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③ 개인 선호를 중시하여 공공서비스 관할권을 중첩시킬 수도 있다.
- ④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 theorem)도 공공선택론의 일종이다.

### 해설

- ① (×) 방법론적 집단주의(방법론적 전체주의, 방법론적 신비주의)가 아닌 방법론적 개인주의(방법론적 개체주의)가 특징임. 거시적 설명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기본적 분석단위로 하여 정치·경제 및 행정현상 분석**. 의사결정 주체는 개인이지, 집단 자체는 선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부·행정기관·조직 등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그 구성원인 개인만이 실제의 결정자라고 봄.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의 행동으로 환원이 가능하고, 집단적 현상으로 보이는 것은 개인적 선택행위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인을 전제로 개개인의 정치적 과정을 통한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 분석.
- ② (○)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making)의 경제학적 연구 또는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것”  
 - 연구대상 : 비시장적 분야인 정치·행정 분야 **예** 정부관료제, 투표, 정당제도, 의회, 이익집단 등  
 - 방법론 : 경제학적 분석도구(정치학적 분석도구×)를 사용, 정치과정에 시장경제적 대안을 도입  
 • 비시장적 의사결정(정치적 결정)은 시장의 수요·공급원리만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조직체를 통해서도 결정되는 것으로, 공공정책결정(공공재의 공급수준에 관한 결정 ; 정치현상)에 관한 것이며, 공공정책은 희소한 공공재·공공서비스를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수단.
- ③ (○) 공공서비스 제공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생산·공급으로 행정의 대응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봄  
 • **관할의 중첩** : 복합적 명령체계와 다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중첩적 구조 형성. 공공재 공급조직의 관할중첩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유용. 대등한 수준의 관할중첩에 의하여 공공재 공급의 경쟁성을 높일 수도 있고, 대·소(광·협)의 관할을 겹치게 하여 행정봉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공공재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면 그에 적합한 조직의 규모나 관할의 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협 관할의 중첩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음. 중첩된 관할권의 기관 간에는 영역 분쟁을 하지 않으므로 지역이기주의 같은 갈등구조를 완화시키며,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을 공동 부담하므로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지 않는 외부효과를 극복해 줌.
- ④ (○) 중위(衆位)투표자 모형(Median Voter Model)  
 ㉠ 과반수제 하에서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채택된다는 것. 중위투표자란 선택대안을 둘러싼 그 사람의 선호가 모든 투표자들의 선호체계 중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임. 특히, 양당제 하의 정치적 경쟁은 결과적으로 중위투표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서로 비슷한 합의정치(consensus politics)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음. 중위투표자 정리는 단봉형(단일정점형 single-peaked) 선호체계에서는 다수결제도에 의한 집단적 선택결과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귀결된다는 것으로 투표자들의 선호가 합리적(단봉형 선호)이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것을 다수결에서 선호하게 된다는 것임. 이 과정에서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선거구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해 결국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함.  
 ㉡ Downs는 정당경쟁모형을 통해 양대 정당제 하에서 각 당의 공약이나 정강이 유사해지는 경향(Downs-Hotelling 원칙, 최소 차이의 원칙)이 나타나는 이유를 중위투표자 모형으로 설명.

답 ①

## 25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예산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부처 예산사정을 담당한다.
- ②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작성을 준비한다.
- ③ 기획재정부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사업에 대한 심사보다 부처예산요구총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 ④ 기획재정부는 조정된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해설

- ① (○) 예산편성절차 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한도액 설정이 이뤄지며, 지출한도액이 반영된 예산편성지침이 각 중앙관서에 통보된다.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이 이루어진다.
- ② (○) 지침이 무엇에 대한 지침인지 표현되지 않아 해석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면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예산편성지침이 통보되므로 틀린 내용이 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각 중앙관서는 이를 토대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 국가재정계획수립지침 통보(해당회계연도 전년도 12.31.까지)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예산편성지침 통보 ⇨ 예산요구서 제출
- ③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가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을 준수했는지 검토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부합되는지 확인한 후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를 수정·보완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각 중앙관서의 지출한도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 예산요구총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겠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은 각 중앙관서의 세부사업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중앙관서의 자율적 편성이지만 편성한 금액을 다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예산요구서의 사업·정책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국가 전체 재정운영과의 연계성, 타 중앙관서 사업·정책과의 중복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요구를 수정·보완하게 된다.
- ④ (○)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은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제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옳다.

답 ③